

## 기본소득 정부·자치단체 도입 사례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우 농어가 가구당 전국 최고금액인 연 80만 원을 지원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하반기 도내 참여 희망 4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계획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준비: 2021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도내 인구 4,000명 가량의 1개 면 선정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약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예정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 4,000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예정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 5,000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 (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경북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제정, 2022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 봉화군은 2019년 50만 원, 2020년 70만 원 지급, 청송군은 2020년에 50만 원 지급, 그 외 영양군, 성주군도 농민수당 준비 중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24만 3,000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 강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름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 이름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 2,000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2021년부터 어가 포함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 1월에 농가(5만 5,000 가구)에게 지급. 액수 미정
광주광역시	농민수당(미정)	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 보류

### 육아수당(아기수당)



#### 강원도

201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4년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충남도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으며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 2019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9년 11월에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2020년 11월에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 충남도민을 위한 정책 소통의 열린 마당

2021.05. — 제1호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정책마당

#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현황과 방향



### '충남형 기본소득' 현주소와 방향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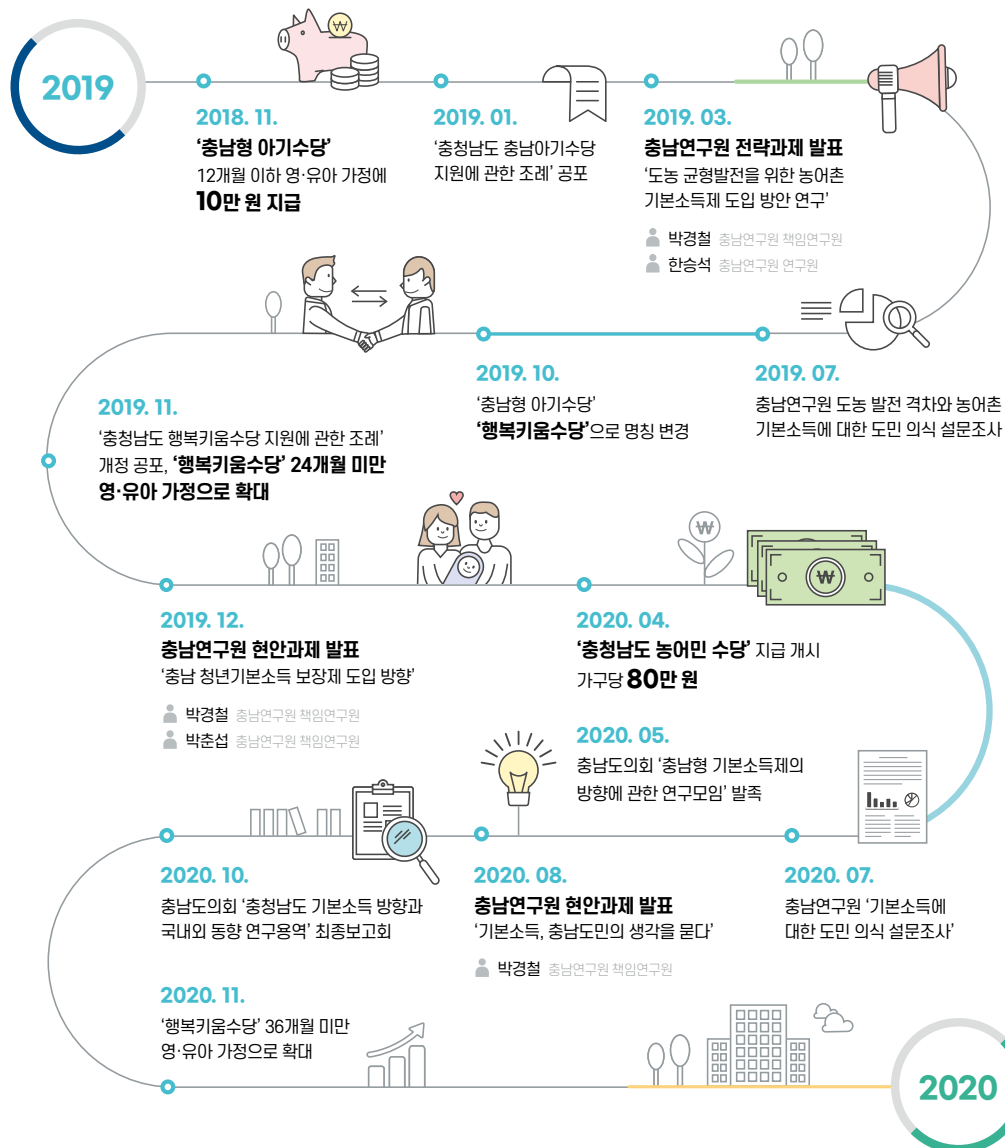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충남연구원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충남형 기본소득'의 추진 현황까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충남도민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충남형 기본소득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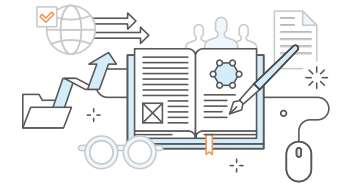
## CONTENTS

- |                             |                           |                          |
|-----------------------------|---------------------------|--------------------------|
| 02 충남연구원 기본소득 정책연구 타임라인     | 05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①행복키움수당 | 08 '충남형 기본소득' 종합 평가      |
| 03 기본소득 개념과 도입 배경           | 06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②농어민수당  | 09-10 '충남형 기본소득' 정책 제언   |
| 04 충남도민 기본소득 인식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 | 07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③청년수당   | 11-12 기본소득 정부·자치단체 도입 사례 |

## 충남연구원 기본소득 정책연구 타임라인



## 기본소득 개념과 도입 배경



### 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치공동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보편성)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제도

### 기본소득 유형



농민수당



청년수당



아기수당

### 기본소득 도입 배경

사회 양극화의 심화	선별복지의 한계	일자리 감소	인권 인식의 확대
<p>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 악화. 노동자, 농민의 박탈감 심화</p>	<p>선별복지는 복지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혜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p>	<p>4차산업혁명,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대량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복지 증대가 필요</p>	<p>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증가</p>

### 기본소득 5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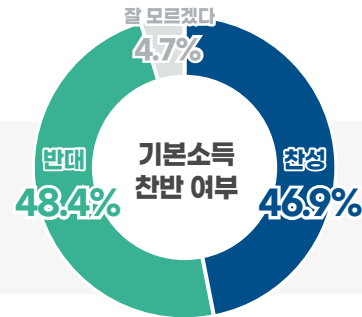
## 충남도민 기본소득 인식도 및 선호도 설문조사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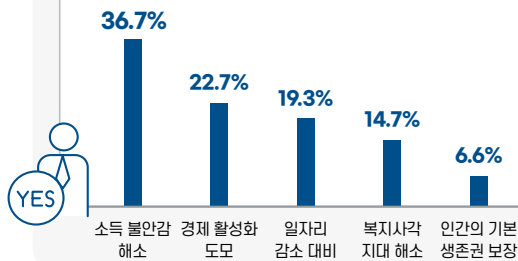
조사지역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성인 320명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0.07.06~2020.07.25 (20일간)  
조사업체 선인리서치



### 기본소득 찬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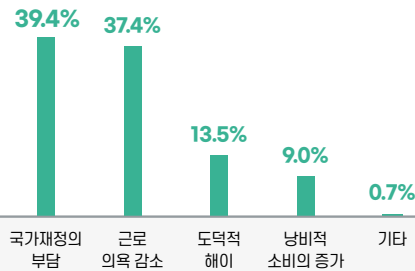
#### 찬성의 가장 큰 이유

소득 불안감 해소와 경제 활성화 도모



#### 반대의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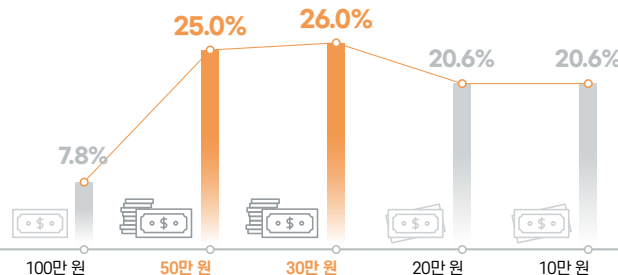
국가 재정 부담과 근로 의욕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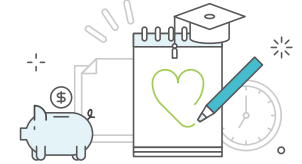
### 전 국민 기본소득 적정 액수(월간)



충남도민  
10명 중 5명은  
**30만~50만 원**



##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① 행복키움수당



### 행복키움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지원기준 및 대상  
소득수준 무관  
만 36개월 미만 아기



지급 금액  
1명당 10만 원



지급일  
2018년 11월부터  
매월 20일

### 행복키움수당 제도적 특징

도내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보편적 복지제도 출발점

다른 지원 받아도  
중복 지급 가능

기존 정부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임

12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영유아 연령 증가할수록  
양육비 증가 부담을 반영

### 충남도민 만족도 조사

도민 10명 중 8명  
**‘경제적 도움’ 응답**

충남도 2019년 5월  
도민 1,081명 대상 만족도 조사

### 경제적 도움 여부



79.8%

도움 됐다



3.2%

그저 그렇다 도움 되지 않았다

### 행복키움수당 지원 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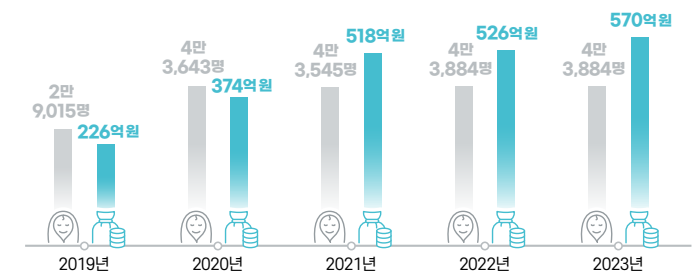
2021년 4만 3,545명에  
**총 518억 원 지원**



대상아동 총계  
20만 3,971명



예산 총계  
2,214억 원



##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 ② 농어민수당



#### 농어민수당 제도적 특징



####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



####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



※ 운영 수수료 별도(1.5%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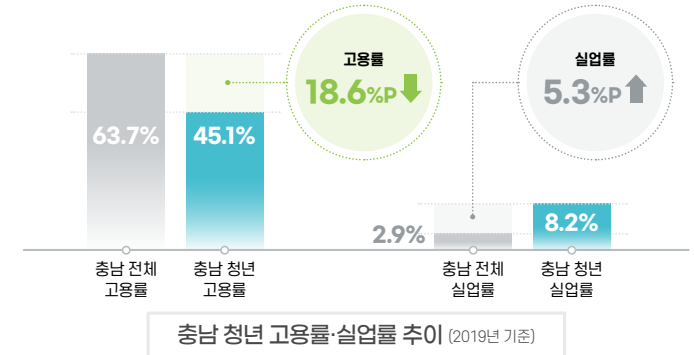
## 충남형 기본소득 추진 현황

### ③ 청년수당



#### 충남 청년수당 검토 배경

- #1** 최근 5년간 충남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
- #2** 청년 고용률, 실업률 등 **청년 고용상황도 악화 추세**



#### 충남 청년수당 검토 현황

##### 충남도의회 청년수당 시범운영 방안 제시

2020년 10월



##### 충남도 청년진흥펀드 설립 및 청년수당 추진 검토

2020년 12월



\* 충청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상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제안

## ‘충남형 기본소득’ 종합 평가



충남도는 농어민수당, 행복키움수당 등  
선도적 정책수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기본소득



현황

2020년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완료

지급 대상 **11만 2,972건**

지원 금액 **1,500억 원**



평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만족감 표시

경영활동 도움 **81.7%**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83.5%**

### 행복키움수당



현황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일괄 지급

지급 대상 **36개월 미만 아기**

지급 금액 **10만 원**



평가

충남도내 모든 아동에 다른 수당을  
받아도 중복수당이 가능하도록 하여  
높은 만족도

경제적 도움 됐다 **79.8%**

## 충남형 기본소득

### 농어민수당



현황

충남도내 농가, 어가, 임가 등에  
전국 최고액 지급 완료

지급 대상 **16만 5,000가구**

가구당 지급액 **80만 원**



평가

코로나19로 인해 농어가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경영안정 도움

### 청년수당



현황

충남도의 청년수당 도입을 위해선  
수백억 원의 재원이 필요  
보편적 복지 개념의 청년수당 지원은  
검토 단계임

※청양군은 2022년부터  
청년수당 도입 예정

## ‘충남형 기본소득’ 정책 제언



### 기본소득



## 여야 정치권 주요 의제인 만큼 공론화와 사전 검토 필요

### 정책 제언

#### 1 공론화를 통해 도민에 적극 알리고 의견 수렴해야

기본소득을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중요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남도에서도 적극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 2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도 차원에서 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정책 방향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 행복키움수당



## 도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더욱 확대방안 필요

### 정책 제언

#### 1 도민 대부분 도입을 찬성하고 만족해 확대 필요

행복키움수당은 남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정부·자치단체 지원 금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필요  
출산가정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해 매달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 필요 (현재 강원도는 출산가정에 매달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충남형 기본소득’ 정책 제언



### 농어민수당



### 지급액 상황과 농·어민 개별 지급방식 검토 필요

#### 정책 제언

#### ① 농어민 필요성에 공감해 지속 시행 바람직

농어민수당은 도민들이 상당히 인지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농여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만족도도 높아 지속 시행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해야

#### ② 지급금액 상황하고 농어민에 개별 지급 추진

농어민수당은 월 최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고 농·어가당 지급이 아닌 여성 농업인을 포함해 농·어민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수당



### 시·군 먼저 도입 후 충남도 차원의 도입 필요

#### 정책 제언

#### ①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필요

충남도는 도내 청년들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남도 청년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 형성 필요

#### ② ‘(가칭)충남도 청년기본소득제(청년수당제)’ 추진위 구성 검토

충남도,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활동단체 대표자, 청년대표, 시민단체,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충남도 청년기본소득제(청년수당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급 대상, 인원, 방식, 지급 조건, 관리 및 홍보 방법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논의

#### ③ 여건 가능한 일부 지자체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대 필요

청양군이 2022년부터 청년수당제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된 시·군에서 먼저 도입한 후 이후 충남도 차원의 도입 필요

## 기본소득 정부·자치단체 도입 사례



### 재난지원금(재난지원소득)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도입, 지급



#### 정부

2020년~2021년 1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 광역자치단체

2020년 재난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저소득층생활비, 생활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지역	지원 명칭	지원 대상	지원 액스	지급 방법
서울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경기	재난기본소득	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2가지 방식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만 원	선불카드
대구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만~90만 원	선불카드
경북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만~80만 원	선불카드 등
	저소득층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34만 7,000여 가구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중 택일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소득 상위 30% 가구 (정부 소득 하위 70% 제외 대상)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강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 명	40만 원	선불카드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당 30만~63만 3,000원	지역화폐카드
세종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 원	지역화폐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인(1업체)당 1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만~60만 원	현금
부산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등 18만 8,000가구	1인당 100만 원	선불카드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20만~50만 원	경남사랑카드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 등 시설 1만 3,064곳	시설당 7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광주	3대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30만~100만 원	광주사랑카드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1인당 10만 원	울산페이, 지역은행 체크카드 중 택일
제주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20만~50만 원	현금

### 청년기본소득

서울시, 경기도 등이 도입, 지급



#### 서울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을 경과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만 19~34세 청년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



#### 경기도

2019년 도내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